



독일과 프랑스,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강조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독일과 프랑스는 10월 23일 열린 EU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중앙은행(ECB)의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발표함.
 - 유로존의 대다수 회원국은 10월 23일 유럽정상회의에서 4,400억 유로에 달하는 EFSF를 1~2조 유로로 증액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으나, 확대 방식을 놓고 논쟁을 계속함.
 - 프랑스는 유럽재정안정기구(EFSF)의 은행화를 통해 ECB로부터 무제한으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지만, 독일과 ECB는 이에 대해 반대함.
 - 그러나 프랑스가 EFSF를 은행으로 만든 뒤 ECB로부터 돈을 빌리자는 종전 주장을 꺾고 ECB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데 동의함.
 - EFSF의 은행화 대신 EFSF의 유로존 국채매입 보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됨.
- ECB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EFSF의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, ① 민간 채권단의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채무 보증안과 ② IMF가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(SPV)에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과 민간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입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음.
 -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신흥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고, 신흥국들 역시 EU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임.
 -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식이 절충되어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예상함.
- 한편, 독일을 중심으로 EU 집행위원회, 유럽중앙은행(ECB) 등은 2011년 7월 유럽정상회의 이후 ECB의 국채 매입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음.

- 2011년 10월 20일 EU 등이 발표한 부실 국채 매입 가이드라인은 ECB가 더 이상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EFSF가 국채 매입을 보증하도록 함.
- 이는 국채 발행자가 민간투자자의 입찰을 받아들일 유인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임.
 - EFSF가 한 국채발행 건 중 최대 50%만을 살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의 매입을 유도함.
 - 예를 들어 국채를 발행하는 회원국이 시장에서 1백만 건의 입찰을 받아들일 때마다 EFSF가 추가로 1백만 건의 입찰을 받도록 함.
 - 다만, 매입 대상은 공공부문이 발행한 유로화표시채권으로 한정해 ECB의 개입 범위보다 제한됨.

■ ECB는 그리스 위기 이후 신용경색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국채매입을 시행해 왔으나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대되자 더 이상의 국채매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옴.

- ECB는 201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로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아일랜드, 포르투갈, 이탈리아, 스페인의 국채 매입까지 총 1,650억 유로를 투입함.
- 그러나 ECB는 더 이상의 국채매입은 본연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힘.

(Bloomberg 10/24, Financial Times 10/19)